

미국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금번 FTA Focus에서는 제한된 공간 등으로 인해 발걸음을 돌린
다수의 FTA 전문가 분들, 제9회 FTA전문가포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FTA무역리포트 독자를 위해 FTA 전문가 대담의
주요 내용을 전하는 기획특집을 마련하였다.



사회 : 정재원(한남대학교 교수)

대담 : 김종훈(前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서울대학교 교수), 윤경호(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고준성(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원산지정보원(원장 김기영)은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 후원으로 지난 12월 8일(금)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룸에서 제9회 FTA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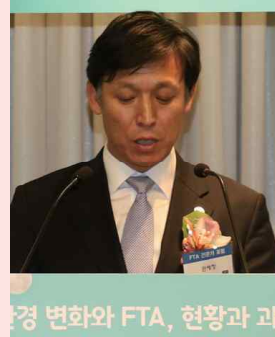


기념촬영 중인 관세청장(첫줄 우측에서 세번째)과 국제원산지정보원장(첫줄 우측에서 네번째)

이 날의 대주제는 “격동하는 통상환경 변화와 FTA, 현황과 과제”로 미국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정책 방향에 대한 대담과 아세안 권역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의 FTA 활용 수출 현황과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등으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금번 FTA Focus에서는 제한된 공간 등으로 인해 발걸음을 돌린 다수의 FTA 전문가 분들과 포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FTA무역리포트 독자를 위해 FTA 전문가의 대담과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을 전하는 기획특집을 마련하였다.

본 행사에 앞서 축사를 맡은 김영문 관세청장은 “FTA는 수출확대, GDP 증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많은 과실을 가져다 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경제·사회시스템도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어 왔다”며 “우리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고 기민하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은 “나아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성과가 크지 않아 보다 정밀한 기업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FTA 활용도를 보다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포럼의 첫순서는 좌장인 한남대학교 정재완 교수의 사회로 국내 최고의 FTA 전문가인 김종훈 (前)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교수(서울대학교), 윤경호 논설위원(매일경제신문), 고준성 박사(산업연구원), 김형주 박사(LG경제연구원)가 참여한 가운데 “미국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정책 방향”에 대한 대담이 진행되었다.



대담의 발제는 고준성 박사와 김형주 박사가 맡았다.

대담의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형주 박사는 ‘미국 중산층 소득수준의 하락과 2018년 미국 중간선거 및 멕시코의 대통령 선거 등을 염두에 둔 대미 통상 협상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다음은 발제내용 중 주요 발언을 인용하여 구성한 내용이다.

김형주 박사(LG경제연구원)의 발제

선도적으로 세계화 및 개방을 추진해왔던 미국과 영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Brexit 결정을 통해 반세계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그 원인은 유권자들의 성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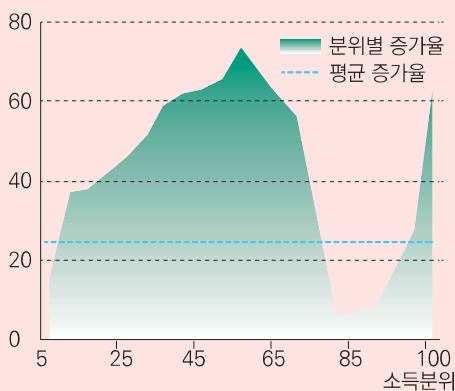
미국 유권자들이 성향은 1988년~2008년 (20년) 기준 전 세계 소득별 증가율 그래프에서 드러난 코끼리 곡선(Elephant Growth Chart)을 통해 최상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중산층의 것보다 두배 이상 높아진 것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소득을 100개 정도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최상위 계층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부유층이고,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코끼리 곡선의 몸통 부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과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중진국이나 후발국에 해당됩니다. 이들 역시 평균소득 증가율 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수의 지구촌 구성원들은 세계화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 긍정적이겠으나, 상위계층부터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선진국 중산층의 소득증가율은 평균소득증가율 보다 낮았고, 이들은 세계화로 인한 피해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체계층을 소득수준으로 나누어 보면, 1970년의 경우 중산층이 매우 두터웠으나 2014년에는 중산층이 줄어들고 차상위 계층이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970년의 중산층이 44년 동안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거나 낮아지고 있는 계층과 70년대보다 훨씬 소득이 높아진 계층으로 분화된 것으로, 전통 제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줄어든 반면 고부가가치서비스업 종사자인 IT기술자나 금융 및 정보산업 종사자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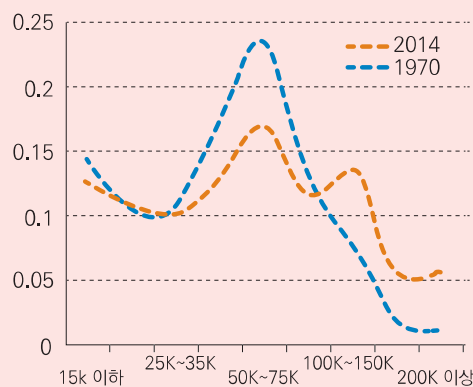
전세계 소득분위별 소득 증가율 차이



주)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자료 : Lakner C. and B. Milanovic, 2015, 'Global Income Distribution :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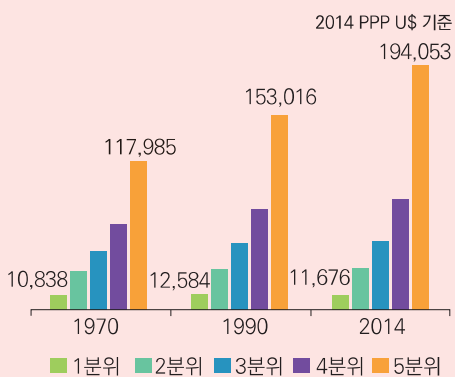
미국 중산층이 상하 계층으로 이동



주) K=1,000US\$(2014 PPP 기준)

자료 : Income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14, U.S.Census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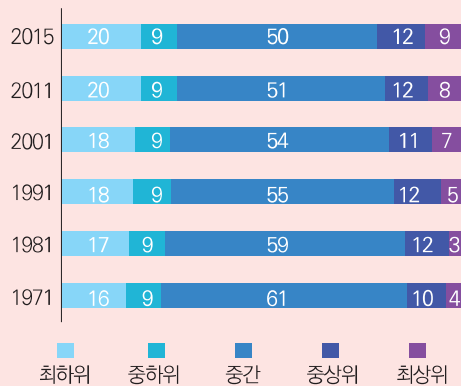
미국의 소득분위별 평균소득 변화



주)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자료 : Income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14, U.S.Census Bureau

미국 중간소득 계층의 비중 감소



주) 각 중위소득의 1/2배 이하, 2/3~1/2배, 2/3~2배, 2~3배, 3배 이상인 가구를 의미
자료 : Pew Research Center, 2015, The American Middle Class Is Losing Ground

여기서 소득이 높아진 계층은 민주당과 세계화를 지지한 유권자들이고, 소득이 낮아진 유권자들은 미국 중부에 있는 전통적인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반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득 수준을 5분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3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 이하의 평균소득은 1970년 44년 동안 거의 늘어나지 않았으나 고소득층인 5분위의 소득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중산층의 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현상이 외부적으로 표출되기까지 시간이 걸린 원인은 활발한 주택담보대출(이른바, 모기지론)로 인해 소득의 감소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즉, 1~3분위 계층의 실질소득이 1970년의 수준에 머물러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어 차나 집을 사는데 별 불편이 없어, 부채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매력을 소득으로 착각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역에 미치는 영향				협상력에 미치는 영향			
		여야 구도				여야 구도	
		여대야소	여소야대			여대야소	여소야대
행정부 정책	시장 개방	$t = 0$ $t^* > 0$	$t > 0$ $t^* = 0$	행정부 정책	시장 개방	F : 최강 C : 최약	C : 최강 F : 약
	시장 보호	$t >> 0$ $t^* = 0$	$t >> 0$ $t^* > 0$		시장 보호	P : 최강 C, F : 약	C : 최강 F : 약

t : 자국 개방 수준, t^* : 상대국 개방 수준

F : 상대국 행정부, C : 자국 입법부,
P : 자국 행정부

선거판세와 비준안 통과 확률			
		선거 승리 가능성	
		불확실	확실
여야 구도	여소야대	매우 낮음	100%
	여대야소	보통	100%

Milner & Rosendorff(1997)

- 여당이 입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행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선호할 경우, 자국의 개방 수준은 낮추고 상대국에게 개방 요구
- 즉,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한미 FTA 협상 결과는 우리에게 불리해질 전망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러한 부채들이 회수되면서 중산층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표출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한-미 FTA나 NAFTA와 같은 국제통상질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선거가 통상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자국과 상대국에 대한 어떤 통상압력이나 개방수준요구는 자국의 여대야소국면이나 여소야대국면 또는 선거승리가 확실할 때와 불확실할 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 승리 가능성이 불확실할 때는 행정부에서 통상의 권한 합의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고, 선거결과의 예측이 명확할 때는 어느 안이 되든지 간에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내년 상반기 상황이 선거결과가 분명해지는 국면으로 간다면 한-미 FTA나 NAFTA의 재협상이 손쉽게 진행되겠지만, 선거결과가 불분명해지면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년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어떠한 통상정책을 유지할 것인지를 2008년 상황과 비교해서 보면, 2008년의 민주당은 한-미 FTA에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선거에 승리한 이후에는 바꿨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합지역일수록 제조업 비중이 높았는데, 미국의 제조업은 수출시장이 열리면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개방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민주당은 당시에 한-미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에 대선 때 트럼프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취했던 스탠스도 동일하게 경합지역에서 시장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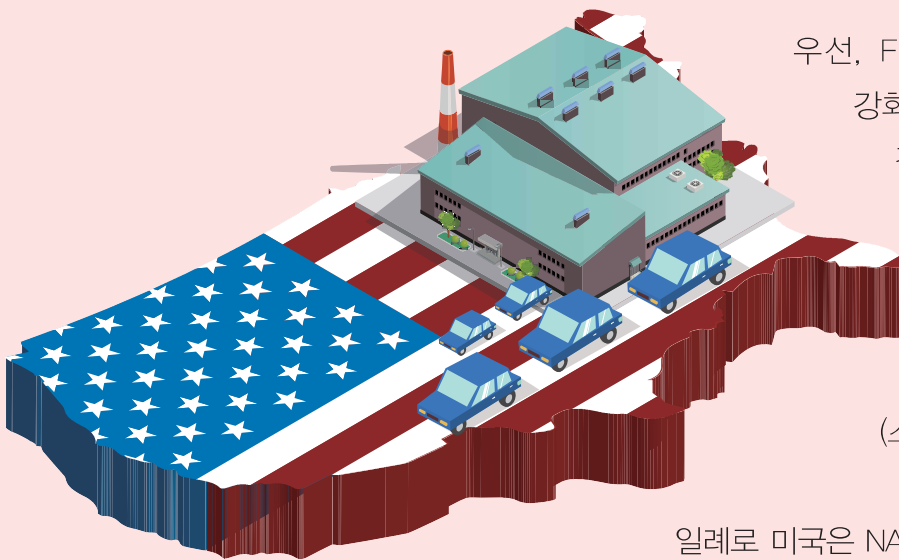
미국의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공화당의 지지율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가 미국 의회의 상원이나 하원에서 로비를 할 때 지역별 특수상황을 고려한 협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준성 박사(산업연구원)의 발제

지난 10월에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은 한-미 FTA 개정 협상 추진에 대한 양해를 하였고, 12월 18일 국내 통상절차법이 완료가 되면 내년 초에 정식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내년에 시작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실무적 차원에서의 대응 과제를 언급하고 다음으로 전략적 차원의 대응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적 차원의 대응 과제는 미국 측이 우리에게 개정 협상을 통해서 요구해온 협상 의제에 관한 우리 측의 대응입니다. FTA 협상 의제는 FTA 협상 조문에 관한 것과 양허분야에 관한 것으로 될 수 있는데, 협상 조문에 관한 것은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우선, FTA 협정에서 특혜원산지규정의 강화가 예상됩니다. 특혜원산지규정을 강화하게 될 경우, FTA 체약국의 기업들은 역외국가로부터의 부품 등에 대한 아웃소싱에 적지 않게 제약을 받고 궁극적으로 역내국가의 부품 사용(소싱)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NA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을 현재 기준인 역내산 부가가치기준 62.5%를 85%까지 상향하여 제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제안이 반영된다면 관련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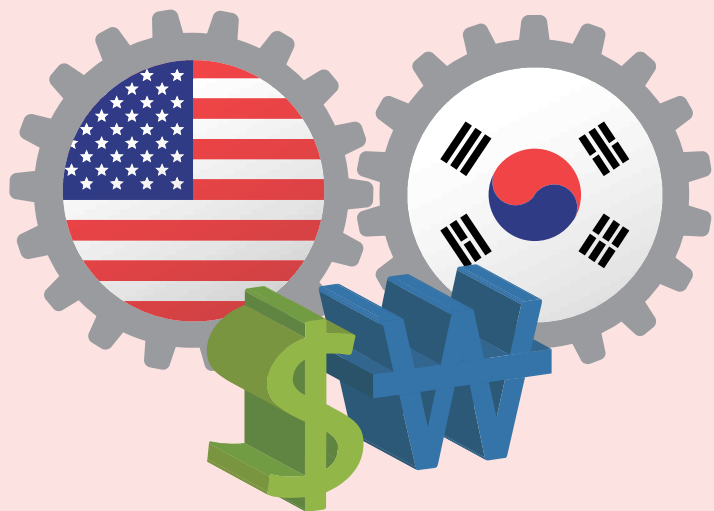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SPS(WTO 위생 및 검역 협정)와 관련하여 TPP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에서 반영되었던 수출국가의 입장을 보다 강화하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나 위험정보교류(Risk Communication) 등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경제무역촉진을 위해 IT상품이나 서비스가 진출하는데 방해되는 장벽과 매뉴얼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니다. 구글(Google)의 경우, 맵핑서비스에 한국의 지리정보 이전 허용이나 클라우드 또는 컴퓨팅 서비스 관련 정보의 현지저장요건(Localization) 철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규제의 실질적인 완화를 위해서 미국이 TPP에 반영시켰던 규제 일관성 챕터(Chapter of Regulatory Coherence) 또는 모범 규제나 규제 협력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범 협정의 도입을 제안할 가능성이 큼니다. 미국은 한-미 FTA 이행에서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약속은 하는데 실재 이행이 되지 않는 것에 있으며, 이는 국내규제와 관련되었다는 인식에 기초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FTA 협정 대상이 아닌 국영기업에 대한 규제 조항 신설인데, TPP에서는 국영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규제할 수 있는 무역규범 강화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양허분야에 관한 것은 우선 양국의 이익균형, 즉 미국 측 무역수지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 양허의 개정 협상 제의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에서 제기된 주장인데, 예를 들면 철강이나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양국이 이미 체결하여 발효된 FTA 협정의 관세율을 재조정 한다는 것은 합의정신에



반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미국 측의 철강에 대한 MFN 세율은 영세율이며 자동차는 2.5%이므로 FTA 특혜관세율의 조정을 통해 무역수지 개선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FTA 협정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추가 자유화가 제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일부 과실에 대한 특혜세율에 대한 철폐나 단계적 철폐기간의 단축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허분야에 관하여 예상되는 마지막 FTA 협상 의제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완전한 시장개방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를 통하여 개방된 법률시장에서 미국의 합작법인에 대해 50%이상의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응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측의 본 개정 협상 제안 배경인 무역의 불균형과 일자리 잠식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이러한 미국 측의 인식에 대해 대응 방안은 각 분야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그릇된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공식적인 실무차원에서 제기한 전략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에 대한 대응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협정의 폐기 제안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에서 한-미 FTA 폐기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양국의 손실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세부적으로는 상품무역의 경우 미국 측이 우리보다 많은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미국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염두에 둔 협상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특징인 외교안보 분야와 연계한 협상의제 제안에 대한 대응입니다. 잠시 후 토론을 통해서 미국과의 FTA 개정 협상에 대한

대응 방안이 구체화 되겠지만, 여기계신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님 한-미 FTA 협상 때 말씀하셨던 양국 이익의 균형(Balance of Interest)을 견지하는 협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좌장인 정재완 교수(한남대학교)의 사회로 대담회는 진행되었다.

좌장 :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 측은 오는 18일 국회보고 일정을 마지막으로 하여 협상에 돌입할 준비가 끝나지만, 미국 측은 무역촉진권한법 상 협상 개시 90일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 개시 이전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대통령의 의제권한으로 진행된다면 부분개정으로 관련 협상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종훈 장관님은 미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협정으로 한-미 FTA를 지목하는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김종훈(前 통상교섭본부장) : 전, 미국 측의 불공정 협정이라는 주장에 어떠한 관점에서든 논리적으로 반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협정의 불평등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한-미 FTA는 양국 간에 모두 이익이 되었으나 한국 측에 조금 더 이익이 편중되었으므로 상호 호혜의 입장에서 균형된 이익을 추구하자고 하니,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가급적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좌장 : 안덕근 교수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WTO 체제에서 추구하는 개방과 협력의 방향과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통상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요.

안덕근(서울대학교 교수) : 1948년 GATT가 출범하고 1995년 WTO로 확대 발전된 이후, 최근 전 세계 국제통상체계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상당히 우려되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직권조사 개시입니다. 미국의 직권조사는 미국 기업들이 사업보호를 요청하지 않아도 상무부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는 겁니다.

미국이 반덤핑 직권조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는 1985년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256k 반도체입니다. 미 상무부의 직권조사 이후에 수출이 급감한 일본은 5년 이내에 일본 반도체시장의 20%는 무조건 미국 반도체를 사용한다는 조건과 일본 반도체업체들은 전 세계 수출 가격 및 물량 정보를 미국 반도체업체에게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반도체 협정을 맺게 되어 일본 반도체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미국의 직권조사는 1991년 캐나다산 연목재 상계관세 이후 처음인데, 미국의 로스 상무부 장관의 청문회 발언과 같이 직권조사는 협상의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국의 통상정책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좌장 :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미국 국내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미국은 2018년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윤경호 국장님 미국의 중간선거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윤경호(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계층은 기독교 근본주의에 가까운 복음주의 세력으로 백인 중산층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철강과 자동차 산업과 같은 러스트벨트(녹슨벨트 이른바, 사향산업지역)의 산업 종사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대비하여 본인을 지지하는 특정계층의 결집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호무역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에게 보내는 국내 정치용 사인이고, 그 연장선상에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의 본국 회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미국의 내년 중간선거 이전까지 계속해서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닥쳐온 한-미 FTA 개정 협상 압박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좌장 : 한-미 FTA 폐기 발언에 대해서 고준성 박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성(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미 FTA 개정 협상이 타결되면 한-미 FTA 협정은 개정되는 것이고, 협상이 실패한다면 기존의 협정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그 결과에 불만이 있는 당사국이 협정의 폐기 통보를 하고 일정기간 이후에 협정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미 FTA가 폐기되면 FTA 양허세율은 양 당사국의 MFN 세율로 회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 측의 대미 수입품목에 대한 MFN 세율은 평균 4%인 반면 미국 측은 약 8%에 육박합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이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해 보았더니 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해 수출이 줄었는데, 미국 측이 상품무역에서 약 14억불 정도 더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측의 대한민국 무역흑자가 연간 150억불 이상인데, 특히 로열티라는 지적재산권 부분에서 50억불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만일 한-미 FTA가 종료되면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확보하고 있는 서비스 시장의 손해를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할 때, 미국 측의 한-미 FTA 폐기 주장에 협정의 폐기만을 막기 위하여 수세적일 필요가 있겠는가의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미 FTA 폐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객관적으로 미국 측이 크기 때문에, 한국 측도 협상의 폐기 카드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선택의 한가지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좌장 : 최근의 NAFTA 협상을 보면 미국은 일몰제를 주장하여 5년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해당 협정의 폐기를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처음에 완강한 거부의를 표명하다가 요사이 수용하자는 입장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성 박사님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일몰제에 대한 제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고준성(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NAFTA와 한국의 입장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NAFTA의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수많은 미국기업과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NAFTA의 폐기가 가져오는 영향이 대단히 큼니다.(그래서 미국 측의 일몰제 제안도 수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환경이 다르므로 미국 측의 협상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좌장 : NAFTA의 협상과정은 미국이 처음부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였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 수개월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보도한 바 있는데, 김종훈 장관님은 NAFTA 개정 협상의 결과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김종훈(前 통상교섭본부장) : 지난 9월 초 노동절 연휴 주말에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주관으로 경제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NAFTA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NAFTA 폐기를 거론했는데, 경제자문회의 의장 등이 NAFTA 폐기에 따른 경제 및 외교 등의 파급효과를 우려하며 폐기 불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피터 나바로 교수(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는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적은 한-미 FTA를 거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한-미 FTA 폐기 통보서한의 작성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또한 통상협정은 통상절차법에 따라야 하므로 NAFTA의 개정 협상을 위해 지난 5월 의회에 NAFTA 개정 협상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에 대해서는 의회에 개정 협상 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른 정부와 협상을 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입법절차는 반드시 수반됩니다. 즉 정부 간 협상의 결과에 따라 국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 입법기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NAFTA의 경우가 그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통보를 한 것이고, 그 다음 부터는 행정부 권한 밖에 있게 됩니다.

이하는 제 추측입니다만, 미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미국 내 국내법을 개정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 전해오는 뉴스 가운데 한국산 세탁기에 대하여 미국이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세이프가드는 미국이 지난 15년간 한번도 조치한 바 없습니다.

한-미 FTA 제10장 무역구제에서는 제1절이 세이프가드, 제2절이 반덤핑과 상계관세입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FTA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증명하게 되면 취할 수 있는 조치이지만, 그 조치의 한계가 기존의 MFN 관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2.6%이고 한국은 8%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미국 대통령에게 120만대까지 50%의 관세를 부과하자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당하게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 우리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취하여야 할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NAFTA 협상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김형주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미 FTA 협상 당시 기본 베이스는 NAFTA였습니다. 당시 NAFTA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수준으로 한-미 FTA의 협상은 진행되어 벌써 10년이 흘렀고, NAFTA는 20년 이상 경과되어 이번 NAFTA 개정 협상에서는 지난 20여년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나 제조업의 사양화 같은 문제가 전반적인 개방을 목표로 하는 협정인 NAFTA에 반영하기 힘들어, TPP를 통해 공정성의 문제, 지재권 등의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의 정황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멕시코도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친기업적인 여당은 NAFTA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반미·반시장·반개방적인 야당은 오히려 NAFTA 폐기에 신중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사전 포석이겠지만, 미국이 NAFTA를 폐기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과 NAFTA 폐기로 인해 국민이 친기업 정서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듯합니다.

좌장 : 근래에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와 통상을 연계하여 한-미 FTA 개정 협상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경호 국장님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윤경호(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앞서서 저를 포함해 김형주 박사님과 김종훈 장관님 등도 일치한 의견을 내셨는데요, 한-미 FTA 개정 협상의 대응 방안에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5년 내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해 평균 100억불에 가까운 무기를 구매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무기 구매 이력에 대한 생색을 협상 중에 강력하게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기 관련 사안은 직접적인 한-미 FTA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가 발표하기도 전에 삼성의 미국 가전공장 설립투자를 유치했다고 생색내는 것과 같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여 일자리의 창출과 제조업의 회생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협상에서 강조하여야 합니다.

수출입은행의 통계를 인용하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올 상반기만 해도 전년도에 2배에 달하는 100억불에 가깝고, 누적기업의 숫자도 879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좌장 : NAFTA에서는 관세행정과 밀접한 사항이 요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에 대한 면세를 하루에 150불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미 FTA를 통해서 200불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자상거래 구매물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2016년 하루기준 800불로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하여 NAFTA 개정 협상에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면세한도의 상향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전자상거래 시장은 약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가운데 70% 정도가 미국에서 오고 있으며 그 시장의 성장속도가 빠릅니다.(2012년~2014년 연 50%, 2015년~2016년 성장세 정지, 2017년 30% 이상 급증)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세까지 면제되어 면세의 폭이 큰 전자상거래 구매물품에 대한 면세한도의 상향 제안을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청할 경우에 대해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고준성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성(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디지털 트레이드는 미국의 새로운 무역협정에서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NAFTA에 전자상거래 해외구매 1일 면세한도범위의 상향 제안입니다. 지난 9월 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과 ITC(미국무역위원회)가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내년에 비공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을 정도로 디지털 트레이드를 중요한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트레이드 분야에서 중요하게 관심을 두는 분야는 관련 규제(장벽)철폐입니다. 즉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미국에 플랫폼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접근을 용이하도록 법적 장치나 국제규범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좌장 : 마지막으로 김종훈 장관님께서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전체적인 방향이나 준비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종훈(前 통상교섭본부장) : 국가 간에 협상을 하면 초반에는 긴장이 고조되다가 일정기간 조정기간(cooling off)을 거치게 되는데,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즉 협상장 밖에서 이해관계의 득실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NAFTA 협상은 한-미 FTA 협상보다 먼저 시작했고 올해 말에 끝내기로 하였으나 2018년 1분기로 순연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에 멕시코 대선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 정치적 이벤트가 지속되는 형국이라 특정국가차원의 통상압력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긴호흡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하여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자유무역협정문에는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나 투자의 규모, 균형된 무역수지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한-미 FTA 조문 개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불평등한 교역구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계기로 양국은 서로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 측의 협상 대표는 미국 측이 제안한 개정 협정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서 발간한 국경무역장벽보고서 등도 면밀히 검토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균형된 양국 간 교역을 가져오는 실효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 한-미 FTA 공청회 마다 다뤄지는 중요한 이슈가 농업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압력 등의 우려로 보이는데,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불만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 협상을 효율적으로 가져가고자 전략적으로 개정 제안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데이터 트레이드에 관한 개정 제안이 요청될 수 있는데, 이를 계기로 하여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필수적인 양국 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무기구매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셰일가스)의 구매,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등의 결과를 산술적으로 표현하여 이익의 균형이 이해되도록 시간적 요인을 적절히 활용하여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